고수온에 벌교 꼬막 집단폐사…현장 가보니

꼬막이 없다 벌교의 절규

속 텅텅 빈 꼬막에 망연자실…어민들 "올해 농사 다 망쳤다"

남획으로 어획량 줄어드는데 종패 비용 등 적자 쌓여 한숨만

"다 죽었습니다. 내년에 키울 꼬막 종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황폐화된 갯벌에서 인공종묘 생산 기술로 아둥바둥 꼬막을 생산해오던 벌교 어민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26일 벌교에서 만난 어민들은 싹쓸이 남획으로 갯벌이 황폐화된데다, 그나마 양식해오던 꼬막마저 이상 기후 등으로 집단 폐사하면서 바다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날 오전, 양식장을 찾은 박종모 벌교 어촌계협의회장은 "벌교지역 새꼬막 양식장의 90% 이상에서 새꼬막 집단폐사가 발생하고있다"면서 "올해 꼬막양식에 의존하고 있는 벌교 어민들의 수입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촌계가 어민들의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파악한 내용은 "추석을 앞두고 제사상에 올릴 꼬막을 출하하기 위해 9월 초 양식망을 끌어올렸는데, 그물망 속 새꼬막 대부분이 속살이 없고 입을 벌린 빈 껍질만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보성지역 새꼬막 양식 면적은 1만 623ha. 꼬막 종묘를 생산하는 양식장 면적도 627ha에 달한다. 꼬막 종묘는 전국의 98%를 보서에서 공급한다.

그만큼 보성에 의존하는 게 절대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꼬막 생산량이 급감, 사실상 멸종상태에까지 이르는 등 이른바 '금꼬막'이 되면서 자원 회복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보성이 지난 2017년 벌교꼬막 명성 회복을 위한 '벌교갯벌 꼬막자원 회복 종합계획' 10년 프로젝트를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가 한몫을 했었다. 보성군은 당시 오는 2026년까지 꼬막자원을 회복, 생산량을 1만t으로 늘려 1500억원에 이르는 지역소득과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 특화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세웠었다.

벌교꼬막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전국 1호로, 헤모글로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약자나 산모, 어린이 성장발육촉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올해 95% 가량 폐사해 생산량도 300t에 못 미칠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내놓는다. 연간 벌교에서 생산하는 새꼬막이 5000t 가량 된다. 자칫 가격 급등 우려도 나올 수 밖에 없다.

당장, 새꼬막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20㎏ 한망에 7만원 하던 가격이 10만원까지 뛰었다.

어민들은 "생산량이 줄어들었지만 코로나로 꼬막을 찾는 식당 수요 등도 감소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꼬막종묘까지 집단으로 폐사하고 있어 내년 양식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벌교에서 어민들의 새꼬막 집단폐사 신고가 이어지자 지난 24일 보성군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벌교 양식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벌교 어민 제공〉

꼬막 폐사 신고가 잇따르면서 보성군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4일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보성군 수산진흥계 직원들과 전남도 해양수산 과학원 연구원은 이날 새꼬막 양식 어장 3군데를 찾아 집단 폐사 상황을 확인했다. 양식 어망을 들췄더니 심한 악취로 썩어가는 꼬막 냄새에다, 입을 벌린 채 속살이 없는 하얀 껍데기만 가득하고 검게 썩어가는 속살을 가진 꼬막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게 현장을 둘러본 보성군 등 관계자들 설명이다.

어민들은 폐사의 원인을 고수온을 지목한다. 올해의 경우 남해안 함평만 전역에 지난 7월 20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다. 지난해 첫 고수온주의보 발령 시점(8월 14일)보다 한 달 빨랐다. 기간도 지난달 26일까지 이어지면서 전년도에 견줘 무려 2배 가량 길었다. 특히 보성 득량만 일대는 고수온주의보가 지속됐는데, 이같은 현상으로 물 속 산소량이 부족해 집단 폐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보성군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일단,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28일 남해수산연구소의 공식 현장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장을 조사한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허승준 연구원은 "집단 폐사의 원인은 7~8월 산란기 이후 약해진 꼬막들이 고수온과 부족한 강수량 등의 원인으로 죽기 시작했고, 양식망에 몰려있어 독소에 의해 도망가지 못한 꼬막들까지 한꺼번에 죽고 있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미친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원인은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폐사한 새꼬막을 그냥 버리지 못하고 따로 처리하는 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18년 여수 일대 새꼬막 생산량 감소원인을 조사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새꼬막이 산란 직후 7~8월 고수온에 노출될 경우 먹이활동 저하 및 스트레스로 생체 에너지량이 감소하고 활동이 약화되는 등 에너지 균형이 무너져 결국 생산량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당시 수산과학원 분석이다.

/보성=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사 정보 유출' 수사 확대…경찰 이어 변호사 사무장 체포

알선·수임 불법성 여부 촉각
구속 경찰 학동참사 등 담당
수사 공정성·신뢰성 의심도

검찰의 광주·전남 경찰에 대한 수사 정보 유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이 최근 경찰에 이어 변호사 사무장도 체포,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가 직무상 알게된 유착관계 또는 사적인 친분 사이에서 이뤄진 수사정보 유출을 넘어 수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사건 수임 과정에서의 알선·소개 의혹 등 형사 사건 수임 비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한 광주경찰청 A경위 사건과 관련, 광주 지역 모 변호사 사무장 B씨를 체포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D씨를 체포한 만큼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A 경위를 구속한 바 있다. 또 전남경찰청 소속 C 경위도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긴 상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 경위와 C 경위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광주·전남 경찰과 변호사 사무장이 공무상비밀누설, 알선수재 등의 혐의 등으로 얽혀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수임·알선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과의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수사 정보 유출이 아닌, 대가·유착관계가 포함된 보안 유출 범죄인 경우 법조 비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검찰이 구속한 A 경위가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된 재개발 비리 수사 뿐 아니라 청연한방병원의 경찰 연루 여부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수사대 팀장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경찰학회보에 실린 '경찰관의 보안유출범죄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논문에서 "수사정보나 단속 정보가 이해관계자에게 유출됐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가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경찰관이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29건을 분석, 79.3%(23건)이 수사·단속 정보를 누설한 대가를 받거나 단속 대상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개인형 이동장치 늘며 교통사고도 증가

광주 3년간 71건…매년 증가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가 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대비 2020년에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로 교통사고는 총 71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5건, 2019년 18건, 2020년 38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3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41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숨졌다.

지역별로는 서울(387건)이 가장 많고, 경기(223건), 대구(43건), 광주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2018년 2건→2019년 8건→2020년 6건 등이었다. 허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정안이 늦어지며 법 공백 속 사고 발생율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조속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동산 투기 의혹 장성군 공무원 숨진 채 발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장성군 5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던 장성군 5급 공무원 A씨가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께 장성군 장성읍 못재터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이날 가족들에게 비관적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선 뒤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도 발견됐다.

A씨는 나노산단 개발과 관련,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 친인척 명의로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A씨가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데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장성군청과 삼계면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광주청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압수한 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중이었다. 추가로 진행되던 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와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이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오늘 전두환 항소심 재판 속행…전씨 불출석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7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은 27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애초 이날 재판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지만 일부 증인의 경우 1심에서도 소환장 송달조차 어려워 전원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전씨는 지난달 9일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한 이후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53594	1	영암군 신북면 간은정로24-10, 5층 501호 [신흥아파트] 84.69㎡	아파트	52,000,000 52,000,000	공부상'5층501'호이나현황'4층501호'
2021타경 245	1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129, 202동 1층 106호[영암삼호퀸스빌2차아파트]59.8044㎡	아파트	57,000,000 57,000,000	
	2	동소 201동 1층 101호[영암삼호퀸스빌2차아파트] 59.8044㎡	아파트	57,000,000 57,000,000	
2021타경 467	1	목포시 용당로266번길17, 4층 402호 [용해동,무등아트빌라] 84.93㎡	아파트	79,700,000 79,700,000	감정서상내부일부누수로인한천장과벽지등훼손있음
2021타경 894	1	목포시 송림로85, 101동 8층 801호 [용해동,센트럴팰리체아파트] 84.903㎡	아파트	222,000,000 222,000,000	
2021타경 50349	1	목포시 양을로91, 105동 9층 905호 [산정동, 일신아파트] 84.93㎡	아파트	96,000,000 96,000,000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6680	1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225-1 483㎡[공부상'대지'이나현황일부'전',일부'건부지'이용중]	대	32,734,000 32,734,000	일괄매각.목록1지상위제시외건물매각제외.목록2수목매각포함
		동소 225-2 13㎡[공부상'도로'이나현황'전'으로이용중]	도로		
2020타경 56432	1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 819 1276㎡[김옥진 5/15지분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분묘수기소재]	전	5,525,000 5,525,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21타경 47	1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1767 1276㎡[박영월,박원상,박덕례,박혜숙1/4지분전부]	전	24,501,000 24,501,000	일괄매각.농지취득증명원요.현황각인접지와경계구분없이목록1은일단의'전',목록3은일단의'답'으로이용중
		동소 2130-2 1603㎡[박영월,박원상,박덕례,박혜숙1/4지분전부]	답		
2021타경 47	2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2023 615㎡[박영월,박원상,박덕례,박혜숙,각1/4지분전부]	임야	1,107,000 1,107,000	
	3	동소 2125-7 908㎡[박영월,박원상,박덕례,박혜숙1/8지분전부.현황인접지와경계구분없이일단의'답'으로이용중]	답	3,541,200 3,541,2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농지취득증명원요
2021타경 108	1	신안군 팔금면 읍리 254-1 317㎡ 제시외수목[매각포함]	대	55,231,000 55,231,000	일괄매각.지상위제시외건물,비닐하우스각매각제외
		동소 255 159㎡	대		
		동소 256 271㎡	대		
	2	동소 866 1775㎡	전	31,950,000 31,950,000	농지취득증명원요
2021타경 50172	1	목포시 산정동 243-34 43㎡	대	28,809,000 28,809,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매각제외
		동소 292-15 54㎡	대		
2021타경 50240	1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1421-463 1653㎡[공부상잡종지나현황타지번과일단지로'답'으로이용중]	잡종지	45,457,500 45,457,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1타경 50592	1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06 2390㎡[노오복지분1/2전부.공부상전이나현황일부'묵전',일부'분묘부지로이용중이며,지상위분묘소재.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13,793,000 13,793,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감정서상평가외묘목매각제외.그이외지상위수목매각포함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1타경 825	1	목포시 죽동 71-1 46.3㎡[박규봉지분210/463전부]	근린시설	352,526,870 352,526,870	일괄매각.목록1지분매각
		동소 71-2 76㎡	근린시설		
		목포시 수문로 27 1층 점포73.09㎡ 2층 점포73.09㎡ 3층 주택76.13㎡	주택및점포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10. 12.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10. 19.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오재홍